호남권 광역발전계획 어떤 내용 담았나

첨단·문화·관광… 성장동력 확충

광주~대구 철도·크루즈 부두 건설 등
정부 부처 의견 거쳐 올 말께 사업 확정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이 마련한 '호남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지역 발전의 청사진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주요 사업이 과학기술 진흥, 발전거점 육성, 교통 물류망 확충, 문화관광 및 자원 이용, 광역경제권간 연계 협력 분야로 짜여져 있는 등 미래 발전을 위한 SOC 확충과 문화·첨단 산업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추진 과정**=호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16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청와대 보고를 시작으로 해당 지자체, 각 부처 등의 심의를 거친다.

호남권광역경제위원회는 오는 10월19일 발전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이 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물어 올 말께 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 또 전국 7개 권역별로 각기 발전계획을 제출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의 경우 통·폐합될 가능성도 있다.

호남광역경제권 지자체들은 호남지역이 수십년 동안 산업경제 측면에서 소외돼 왔다는 점과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적극 부각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채택되도록 할 방침이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어떤 내용 담았나**=발전계획의 골자는 호남권 3개 지자체가 사업을 공동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핵심 사업은 ▲발전 거점 육성(광주·전남 국가공동산단 조성, 전북 국가산단 개발, 동북아 해양관광형 워터 프론트 개발 사업) ▲교통물류망 확충(동북아 신성장 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다도해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 등이다.

또 ▲문화관광 육성 및 자원 이용 효율화(한스타일 전략기지화 프로젝트, 수변·산악·해양생태 관광 벨트 구축)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 방안(광주-대구간 철도 건설, 88고속도로 조기확장, 광양항-부산항 해상셔틀 운송시스템 구축)도 포함돼 있다.

동북아 해양관광형 워터 프론트 개발사업은 항만 재개발을 통해 관광, 산업, 문화가 어우러진 친수 복합 공간으로 지역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예산은 36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비 1천490억원으로 추산되는 다도해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사업은 서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역사,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주요 섬을 순항하는 크루즈 선을 운항하는 사업이다.

한스타일 전략 기지화 프로젝트는 각종 의병활동의 콘텐츠를 발굴해 의병약사문화박물관 및 의병운동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 광역 경제권 주요 사업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투자액 (국비)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광주시 광산구 진곡산단 내 2,710,756㎡	2009~2016	1,200,000
광주 R&D 특구 지정 육성	• 광주 첨단·하남·진곡산단, 광산 두정동 GB, 전남 장성 GB 43,000,000㎡	2009~2013	1,300,000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 광주 광산구, 함평군 주변 12,390,109㎡ • 광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 디지털정보가전, 신소재, 생물산업	2009~2016	1,096,500
동북아 해양관광형 워터프론트개발사업	• 목포시 해안동, 금화동 일원, 157,500㎡ • 항만재개발을 통한 친수복합공간 조성 및 해양관광거점 구축	2009~2016	36,600 (36,600)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 목포, 신안, 해남, 진도, 무안, 강진 일부 • 해양관광레저, 신재생에너지, 물류산업 등	2009~2028	7,500,000 (2,500,000)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최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제40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종합 우승한 우리 대표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고만 나와도 큰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겠다"

李대통령 기능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학에 안 가도, 좋은 학교를 안 나와도 훌륭한 그 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고,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인재가 될 수 있다. 명문고 안 다녀도, 공업고등학교 나와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0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한 한국선수단 및 관계자 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인력을 국가가 제대로 활용 못했다"며 "제대로 활용했으면 우리가 스위스나 일본만큼 갈수 있었지 않나. 대한민국도 스위스, 일본만큼 따라갈 수 있다"고 우수 기능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제품이 세계에서 일등을 하고 있지 않나"고 반문하면서 "여러분이 인정받고 대우받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주요하게 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4년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간 사람보다 4년 이후 여러분이 더 대우받는 게 공평한 사회"라면서 "독일이 왜 최강대국인가. 훌륭한 기능인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대학교육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업계 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최고 기술 인력이 되는 기술교육을 더 중시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감투 나눠먹기 압박 환멸 느껴
교육위원 이권 개입 그만해야

사퇴의사 밝힌 서견용 전남도교육위 의장

전남도교육위원회 의장직을 둘러싸고 벌어진 내분 끝에 의장직을 내던지겠다고 밝힌 서견용(68) 전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을 15일 오전 만났다. 인터뷰를 한사코 사양하던 그는 1시간여의 설득 끝에 굳게 다문 입을 열었다. 서울대 사범대 외국어과 출신인 서 의장은 녹동고 교장을 거쳐 해남교육장을 지내는 등 40여년간 지역 교육계에 몸 담아 왔다.

-결국 사퇴를 결정했는데.

▲오늘(15일) 오전에 (나에게 물러날 것을 주장해왔던) A의원에게 사퇴의사를 밝혔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었다.

-왜 위원들이 사퇴를 요구한 것인가.

▲(잠시 긴 한숨을 내쉰 뒤)리더십 부족, 의장실 비서진과 운전원 정실 채용, 집행부 등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등이 이유라고 하더라. 하지만, 결국 감투(의장직)욕심 아니겠는가.

-비서진과 운전원을 정실 채용했다면 문제 아닌가.

▲하루에 몇만원씩 받는 1년짜리 일용직 여직원을 배치한 것이 비서진 정실 채용인가. 운전원 채용도 그렇다. 전에 근무하던 학교의 기능직 조무원을 운전원으로 데려온 것이다. 신분상 변화도 없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 교육위 의장이 운전원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모두 트집이다. 다른 사람을 의장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는가. 그래놓고 리더십이 없다고 한다.

-지방교육자치법상 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취임 당시 '의장직을 1년씩 나누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번사태가 발생했다는 말도 있던데.

▲(격앙된 목소리로)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묻고 싶다. 당시 B위원이 의장이 되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 노력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상상해 보면 알 것이다. 위원 9명중 나를 포함한 5명은 B위원을 밀었고 4명은 그사람이 의장되는데 반대했다. 그대로라면 4대5로 B위원이 당선될 판이었다. 그런데 선거일에 임박한 어느 날, A위원이 나에게 전화를 해 '당신을 추대할테니 의장직을 맡아달라'고 했다. 대신 1년만 하고 다른 위원에게 양보하라고 해서, '반쪽' 짜리는 안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A위원이 또 다시 연락해 "B위원이 의장을 맡으면 내분이 심해진다. 조건없이 맡아달라"고 해 고민끝에 수락했다.

-그런데 왜 자꾸 의장직 나눠먹기 얘기가 나오는가.

▲의장을 맡고나니 낙선한 B위원이 찾아와 6개월만 하고, 본인에게 (의장)자리를 물려 달라고 했다. 본인은 6개월만 하고, 위원직을 사퇴한 뒤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통사정을 해 결국 내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꿈이 그렇다면 일단 6개월간 최선을 다해 노력(활동)해 봐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결정하자"고 했다. 그런데 B위원은 그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을 놓고 B위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의장선거직후 앙숙이었던 A와 B위원이 요사이 갑자기 연합해 또 다른 위원을 의장으로 내정해놓고 나를 압박하고 있다.

-의장직 1년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듯 한 데, 아쉬운 점은.

▲첫째 도 본청 인사문제다. 그런데 교육위원들이 임시회 등에서 교육청 인사를 놓고 집행부를 질타한 적이 있던가. 없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또 일부 위원들이 이권에 너무 개입한다. 교육청 안팎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내 얼굴이 후끈거린다. 고치고 싶어도 혼자 힘으론 안되더라. /박진표기자 lucky@

F1지원법 오늘 통과될 듯 국회 본회의 상정

내년 10월 영암에서 개최될 포뮬러원(F1)대회 지원법안이 1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도 최대 현안인 F1 지원법이 12번째로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F1지원법은 이날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F1지원법이 통과되면 F1 경주장 건설사업비 국고지원, 조직위원회 설립 등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이달 초 1천96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성사된데다 880억 원의 지방채 발행도 도의회에서 최근 통과됨에 따라 내년 첫 대회 개최를 앞둔 F1대회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F1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대회추진 주체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인 조직위원회를 설립, 대회개최 준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